

황교장 구속 기소, 정원장 법정 최고형 구형 요구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안’ 정부에 건의

자신의 학교 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학부모들에게 고소당한 신양중학교 교장의 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 학부모 및 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당국과 교육부의 안일한 수사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황수연씨 구속수사와 학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이수호)는 8월 9일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황교장 구속 기소’와 ‘정원장의 법정 최고형 구형’, ‘성폭력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두 시위를 벌인 뒤 대통령 앞으로 건의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에게 제출한 건의서에는 대책위가 현재 수사체제의 시민 캠페인과 정부 각 기관에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전혀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검찰당국의 수사 의지 역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강력한 대책을 세워 달라는 입장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검찰에서는 황교장의 잇따른 반복 발언을 집중 추궁하지 않고 ‘피해자의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구실로 황교장을 구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담당 검사를 전근시키는 등 검찰이 수사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의심을 사고 있다. 또 지난 7월 9일 공대위에서 대표자들이 교육부장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바쁘다’는 이유로 면담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현재 성폭력 특별법 개정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책 및 어린이 성추행 추방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책위는 친고제 폐지와 신고의무제 추가, 어린이 보호 부분에 대한 특별 조항 추가, 감독자 보호자에 의한 성폭

력 가중처벌 조항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검·경의 조사과정에서 비밀보장책의 마련

차례나 불러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는가 하면 상담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학생을 조사한답시고 3시간이나 학생을 가둬놓고 진술을 받는 일은 법으로 제

연수 기회 부여, 실효성 있는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교의 성폭력 예방교육 필수화, 일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전문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 종합대책마련을 건의했다. 또 대책위는 정부가 총리실 산하에 교육부, 문체부, 내무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청소년 관련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차원의 상설적인 ‘청소년 성폭력 예방 대책 본부’를 구성하고 이 본부에 학교내외의 성폭력 관계 전담 부서를 운용하며 이와 별도로

것을 건의했다.

한편, 안산시 우성유치원 원장 성추행 사건 대책위원회(위원장 김명수)는 8월 9일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 지방 법원장 앞으로 원장 성추행 관련 참고 자료를 제출하고 재판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책위는 참고자료외에 진정서와 김경주 외 36명의 진술서 및 6천여명의 연서명을 함께 제출했다.

유치원 피해 아동들은 사건 직후부터 심리 치료를 받아 왔으며 8월 22일부터 부모와 함께 하는 집단 치료를 받고 있다. 홍강의 교수(서울대 의대 소아정신과), 소은희 소아정신과 전문의, 안동현 교수(한양대 의대 소아정신과) 등이 치료를 맡아 왔다.

신양중학교와 안산유치원 공대위는 8월 31일 오후 3시 종로공원에서 학교내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대회(가칭)를 열고 대대적인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공동대책위는 8월 9일 성폭력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안을 대통령 앞으로 제출했다.

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 실무간사 김맹규씨(전교조 서울지부 연대사업부장)는 “황교장 사건의 경우 어린 학생들을 4

재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각 교육청에 성교육 전담부서 설치, 성교육 전담 담당교사의 체계적 양성, 상담교사의 확보와 확충, 전문적

관련 시민단체 등이 상설적이고 범국민적인 청소년 성폭력 예방 대책위원회를 구성,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벌여나갈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 줄